바이든 정부 기후·노동 정책과 시사점

김선철

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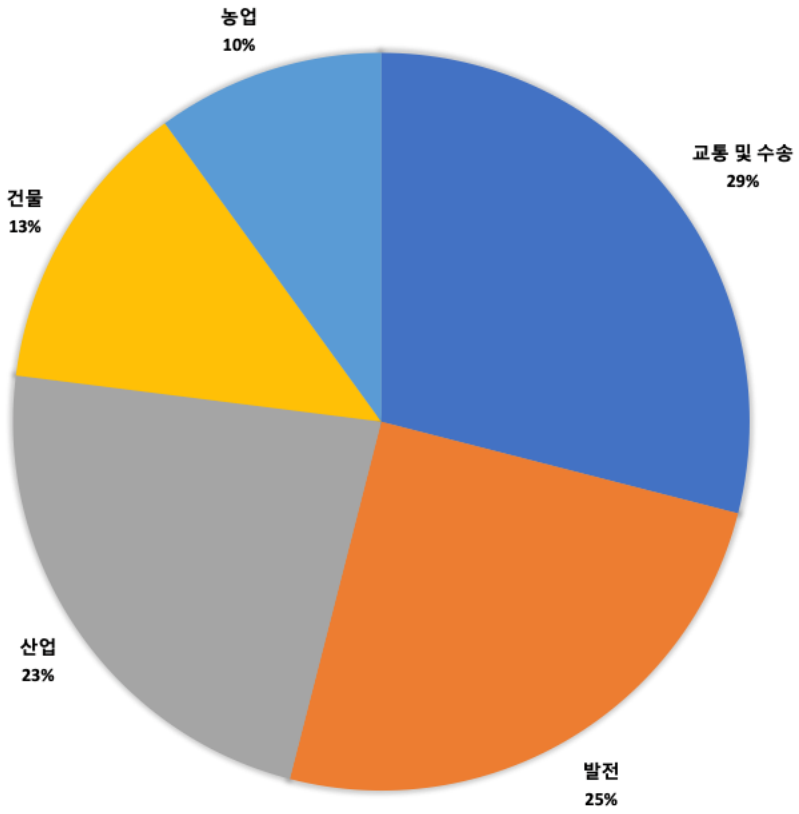
I. 들어가며

II. 바이든 정부 정책의 맥락과 배경
  1) 환경정의
  2) 2008년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사회적 변화
  3) 2019년 '그린뉴딜 결의안'
  4) 코로나19 지원 정책과 그 효과

III. 대선 시기 바이든의 기후·노동 정책 패키지
  1) 대선 공약이 만들어지기까지: 사회운동, 급진화, 바이든-샌더스 TF
  2) 바이든의 대선 공약: "더 나은 미국 만들기(Build Back Better)"
    ○ "노동자 조직화, 단체협상,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바이든의 계획"
    ○ '청정에너지 혁명과 환경정의를 위한 바이든 플랜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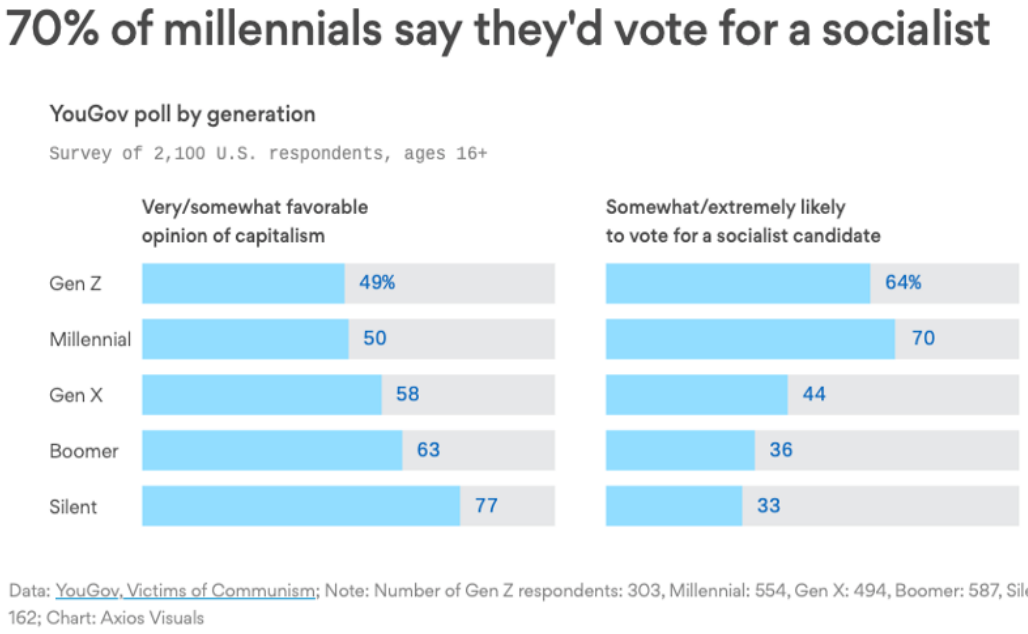
IV. 취임 이후의 행보와 정책
  1) 당선 이후의 행보: 인선(EPA, 기후, 노동 등 내각) + 환경정의 행정명령
  2) 취임 이후 바이든 정책 패키지(미국 구제 계획, 일자리 계획, 가족 강화 계획)와 인프라 법안
  3) 바이든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상원 예산안(Reconciliation Bill)
  4) 바이든의 국제적 야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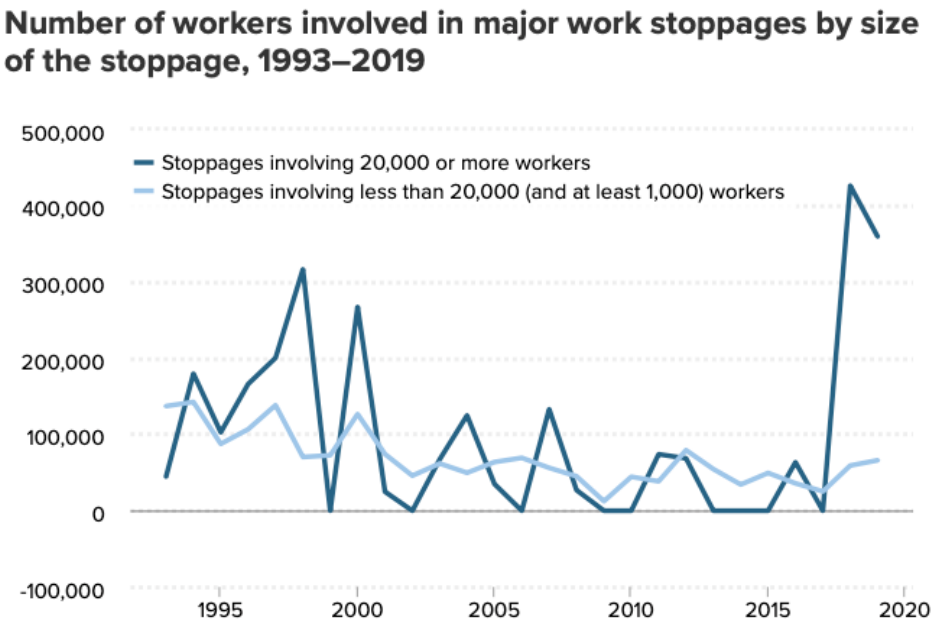
V. 평가 및 시사점



배경과 맥락: 포스트-2008 사회운동 고양

- 2008 금융위기 이후의 파장
  - 2011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: “우리는 99%”
  - “흑인 생명은 소중하다”(2013~), 키스톤 파이프라인 반대 투쟁(2016~), 버니 샌더스 대선 경선 돌풍과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의 팽창(2016~), 미투(2017~), 총기 소유 반대 운동(2018~), AOC 등 스콰드의 워싱턴 입성(2018), 썬라이즈무브먼트 등 기후정의운동의 확산(2019~) +@





정의40(Justice40) 이니셔티브 권고안

- 환경정의: “개발과 환경법안, 규제 및 정책의 시행과 집행에 있어서 민족,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, 출신 국가,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공정한 처우 및 유효한 참여” (EPA)

지역사회 건강, 오염 감소	정의로운 전환	기후정의와 회복 탄력성	스스로를 대변하기
• 의무적 배출 감축 • 환경정의 심사 도구 확립 • 환경규제 및 시행 강화 • 안전한 수도 및 폐수처리 인프라 • 재개발 부지 및 특별기금 개편 • 생애주기 분석 및 유독물질 감소 • 의료 서비스 접근권	• 공동체의 부와 소유권 • 생활 가능한 임금, 건강한 일자리, 노조 가입 보장 • .건강하고 재생가능한 경제 • 직접 영향 받는 사람들 위한 취업 지원 • 토지은행 이니셔티브 • 퇴거 없는 개발	• 홍수 감소 • 폭염 완화 • 녹색 커뮤니티 인프라 • 공동체 농업 • (가짜 해법 아닌) 재생에너지 •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• 주택 단열화 • 기후 탄력성 있는 저렴한 주택 • 무배출 대중교통	• 지역 우선 투자대상 관련 지역사회 지원/감독 • 공동 의사결정 • 책임성과 투명성 • 부처간 협력 • 환경정의 성과 계량적 분석 • 지방도시 포괄

Justice40 Recommendations, Center for American Progress, 20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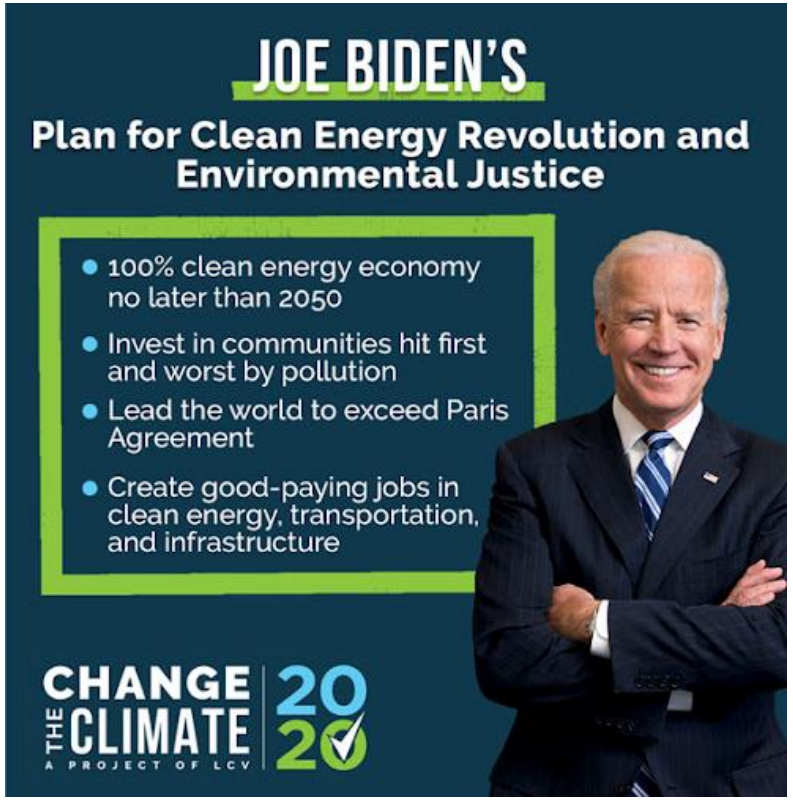
대선 시기 정책

“노동자 조직화, 단체협상,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바이든의 계획”

- 노동자에 대한 기업권력의 남용 제한 및 노동법 위반 관련 기업 임원들에 직접 책임 묻기 (PRO Act + NLRB)
-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협상을 활성화하기 (오픈샵 폐지)
- 노동자들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그에 합당한 임금, 혜택, 및 작업장 보호를 받게 하기(NLRB, OSHA).

‘청정에너지 혁명과 환경정의를 위한 바이든 플랜’

- 100% 청정 에너지 전환과 2050 안에 넷제로
- 더 강하고 탄력성 있는 나라 만들기: 낙후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
- 기후변화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글로벌한 대응 주도
- 유색 커뮤니티와 저소득층에 집중적인 해로움을 끼치는 오염자들의 권력 남용 방지
- 미국의 산업혁명과 이후 수세기에 걸친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했던 노동자와 지역 커뮤니티들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



바이든 취임 후 정책 패키지

미국 구제 계획 (American Rescue Plan)	미국 일자리 계획 (America Jobs Plan)	미국 가족 강화 계획 (America Families Plan)
❑ 감염병 위기와 경제위기 미국인 보호와 경제회복(총 1.9조 달러 혹은 한화 약 2200조 원) • 공격적 백신 보급 • 1400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금 • 주당 600불 실업수당 확대 및 연장 • 아동 1인당 300불 세제혜택 • 월세 보조 •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• 소상공인 지원 • 빈곤층 지원 확대	❑ 수백만 일자리 창출, 인프라 재구축,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구축 (총 2조 달러 혹은 한화 약 2300조 원) • 도로, 교량, 항만, 공항, 공공교통, 인터넷, 건물 리모델링 등 인프라 재구축 • 돌봄 경제를 인프라로 규정 + 돌봄 경제 시스템 구축 •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지원 위한 노동자 조직 및 단결권 강화 • 기업 법인세 인상, 이윤의 해외 이전과 탈세 방지 대책	❑ “더 강한 경제 건설하면서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하기” • 보육부터 2년제 대학과 공립대학 무상화 •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및 현금 지원금 • 교사 지원 강화 및 임금 상승 • 노동자 유급휴가 및 의료/돌봄 혜택 확장 • 돌봄 노동자 임금 상승 • 육아 직접 지원 및 아동 세제 혜택 • 중저소득층 돌봄 및 먹거리 지원 확대 • 학교 급식 질 개선 • 감옥 수감 이후 생활 지원 • 실업보험 강화 및 세제 개혁 • 총 1.7조 달러 (한화 약 1900조)

PRO Act (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)

(1) 노동자, 관리자, 사용자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받는 개인들의 범위 확대

(2) 2차 파업, 즉 다른 현장에서 벌어지는 파업을 지지/지원하기 위한 파업에 조합원들의 참여와 참여 독려 합법화 + 인력 대체 금지

(3)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 방해하려는 시도 금지 + 내부자 고발, 노동법 위반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

청정에너지 퍼포먼스 프로그램 (Clean Energy Performance Program)

- ‘당근과 채찍’ 전략: 전력 생산자에게 매년 4%씩 탄소배출을 저감 의무 부과 – 목표 달성에 지원금, 못한 경우 벌금 부과.
- 의무할당제(RPS), 그러나 REC 시장 대신 국가의 직접 개입
-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단일 정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1500억 달러(한화 약 170조원)의 예산

평가 및 시사점

정책 내용의 상대적 진보성 v. 경제 민족주의(녹색성장), 패권주의

- 환경정의, 기후정의
  - 구조적 억압의 대상이었던 노동자, 유색인종 커뮤니티, 저소득층 지원
    → 시혜성 지원 아닌 사회적 권력 분배
  -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 책임
- 핵발전 유지 + 가스 발전 관련 모호한 태도
- 진보적 아젠다 매개로 한 글로벌 지배력 강화

So what?

- 한국에서의 기후-노동 정책 관련 투쟁에서의 활용 가능성
- 환경정의: 담론과 정책 형성에 있어 프레임의 역할
- 사회운동의 역할 (그러나 2011년 오큐파이 이후 10년의 축적 기간 필요) + 정당정치와의 관계
- 한국의 기후정의운동과 '최전선 당사자' 맥락화하기 + 민주노총의 역할

In the fight for climate justice, indigenous people set the path - and lead the way